

■ 정부, 하반기 경제운용 방향 살펴보니

서민들 대부업 이자 부담 줄인다

정부가 올 하반기의 경제운용방향을 마련해 11일 발표함에 따라 실제 경기회복의 효과를 낼 수 있을 지 주목된다. 전문가들은 소비와 투자 등 내수 회복 조짐으로 인해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지만 뚜렷한 성장동력을 찾기가 어렵고 일자리 창출 미흡 등이 문제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또 서민생활과 직결되는 유류세 인하 없이 등유 특소세 인하 등만을 추진할 방침이어서 '생색내기'라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주요 내용을 간추린다.

- ◇서민경제 안정
 - ▲유류비 부담 완화= 서민용 연료인 등유에 부과되는 특소세(134원/ℓ)를 낮추고 판매부과금(23원/ℓ)을 폐지한다. ▲유류 관련 제도 개선= 정확한 유가 정보 제공과 유통 질서 확립을 통해 소비자 선택의 기회를 넓힌다는 취지에서 석유제품 가격모니터링 제도를 개편한다. 영업용 경차에 대한 취득·등록세를 추가로 50% 감면하는 등 경차 인센티브도 확대한다.
 - ▲서민금융 활성화=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대부업 최고 이자를 상한선을 66%에서 49%로 낮춰 서민층의 이자 부담을 덜어준다. 카드 가맹점 수수료의 경우 원가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정부가 곧 가맹점 업종 구분, 수수료를 공시제도 개선 등을 포함한 수수료 체계 합리화 방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 ▲지방건설업체 지원= 대형업체가 주로 참여하는 단기, 대안입찰방식의 경우 적용 기준을 현행 100억원에서 300억원으로 높여 대상을 축소하고, 혁신도시 사업 추진시 해당 지역업체에 할당하는 사업규모 기준도 50억원이하에서 100억원 이하로 상향조정한다.
 - ▲수출중소기업 지원= 무역금융·수출관련자

혁신도시 건설 지방업체 할당 50억→100억원이하로 상향 소비·투자·내수 회복 조짐에도 일자리 창출엔 미흡 지적도

- 금 대출 보증(70억원 한도) 등을 통해 수출 보증 지원에 적극 나서고 수출 중소기업의 원자재 수급 어려움을 덜기 위해 300억원 규모의 중소기업 협동조합 전용 공동사업자금을 지원한다.
- ▲재래시장 활성화= 시장과 상점가를 연계, 지역중심 상권으로 개발하고 혁신 상인 양성을 위한 교육기반을 확충한다.
- ◇한미FTA 관련 제도·시스템 개편
 - ▲외환규제 완화= 원화의 해외 반출시 현재는 액수가 100만 달러를 넘으면 한국은행이나 세관의 허가를 얻어야 하나 이를 신고제로 전환한다.
 - ▲외국인 원화채권 통합계좌 거래 허용= 외국인 원화채권에 투자할 때 금융감독원에 등록된 뒤 외국환 은행에 본인명의의 증권투자전문 대외계좌와 비거주자 원화계좌를 개설해야 하나 앞으로는 국제에타기구(ICSD)가 투자자를 위해 투자국에 자기명의로 개설하는 통합계좌를 통해 거래할 수 있게 된다.
 - ▲외국 전문인력 소득기준 영주자격 완화= 10년 이상 국내 거주 전문 외국인력에 대해 영주자격 부여시 현재는 1인당 국민총소득(GNI)의 4배 이상 소득이 필요하나 이를 3배 이상으로 낮춘다.
 - ◇기업환경 개선·서비스업 경쟁력 강화
 - ▲2단계 기업 환경 종합 대책= 지난달 발표된 기업환경 개선 종합대책을 뒷받침할 포괄적 동산담보 제도, 저당권 유통화 제도, 소송 남발 방지 제도, 사전심사 청구제 등 기업 관련 법제의 도입 방안을 연말까지 마련한다.

- ▲기업 승계 세제 지원 개선= 중소기업 승계가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기업 승계시 상속세 등의 경감을 검토해 현재보다 세제지원을 확대한다.
- ▲정보통신기술 관련 법·제도 정비= 인터넷 TV(IPTV), 유비쿼터스 도시(u-City), 교통카드 등의 규제를 정비하고 표준을 만들어 서비스 도입을 촉진한다.
- ◇부동산 안정대책
 - ▲공급 확대= 제시된 주택건설 목표(수도권 29만7천호, 전국 53만호)를 이행하고 택지확보 문제는 환경부와 국방부, 문화재청 등이 참여하는 '택지 태스크포스'를 통해 해소한다.
 - ▲분양가 상한제 시행= 분양가 상한제를 실시, 평균 20% 이상 저렴한 신규주택을 공급하고 분양가 내역공시를 통해 정보를 제공한다.
 - ▲투기 억제= 고가주택·다주택 보유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양도세 증가 등 부동산 세제와 주택 담보대출 규제를 유지하고 채권보상을 활성화해 보상의 과도한 부동산 시장 유입을 방지한다.
- ◇금융산업의 발전기반 확충
 - ▲자본시장통합법 후속조치= 2008년 6월(법률시행 6개월 전)부터 신규인가 등이 개시되므로 그 전에 하위법령과 감독체제 정비 등 후속조치를 완료한다.
 - ▲전자증권제도 도입= 현행 공사채등록법을 전면 개정해 '(가칭)전자증권특별법'을 제정함으로써 전자증권제도를 도입한다. 주식, 사채, 국

2007년 정부 경제전망 조정 내역



코스피 장중 1,900찍고 하락세

UBS증권 "2,300간다" 목표치 상향

11일 코스피지수가 장중 1,900선을 돌파한 가운데 한 증권사가 향후 12개월 목표 지수를 2,300을 제시해 관심을 끌고 있다. 코스피지수는 11일 오후 1시40분 전날 대비 5.81포인트(0.31%) 오른 1,900.34를 기록, 사상 처음 1,900선을 넘어선 이후 40여분간 1,900선 위에 머물렀으나 외국인의 매물공세로 다시 밀려 4.57포인트 내린 1889.96으로 마감됐다. 반면 코스닥지수는 5.17포인트 오른 820.02로 마감됐다. 외국계 증권사인 UBS증권은 11일 기업 실적 개선 추세와 국내 주식형펀드로의 자금 유입 등을 근거로 코스피지수의 12개월 목표치를 기존 1,850에서 2,300으로 상향조정했다. UBS증권은 이날 보고서에서 "코스피지수 2,300은 2008년 예상 실적 기준 주가이익비율(PER) 13.3배로 1990년 이후 역사적인 평균치인 13.4배와 비교할 때 과도하지 않은 수준"이라고 밝혔다. UBS증권은 이와 함께 코스피지수 목표치 상향의 배경으로 ▲기업실적 회복세 ▲이익추정치 상향조정 ▲국내 주식형펀드로의 자금유입 ▲낮은 밸류에이션을 제시했다. UBS증권은 "기업들의 순이익이 지난해 4·4분기 전분기 대비 2%의 회복세를 보인 데 이어 올 1·4분기에는 18% 증가세를 나타냈고, 하반기로 갈수록 더욱 견조한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며 "아울러 5월 이후 이익 추정치도 상향조정되고 있다"고 밝혔다. /정필수기자 bungy@kwangju.co.kr

차량정비 과잉수리땀 과태료 100만원

앞으로는 자동차 정비업체가 차량을 '과잉 수리' 할 경우 법적 제재를 받게 된다. 11일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 1월19일 공포된 개정 자동차관리법이 오는 20일부터 발효됨에 따라 고객에게 정비견적서와 정비내역서를 교부하지 않거나 고객의 동의 없이 임의로 수리를 하는 정비업체에 대해서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중·대형부품을 사용하면서 이를 고객에게 알리지 않거나 정비 후 사후관리를 거부하는 경우에도 같은 제재가 해진다. 손보업계는 이번 개정 법률의 시행으로 차량 정비시 멸정량 부품을 교체하거나 재생부품이나 위조부품을 사용하는 정비업체의 관행을 시정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자동차보험 대물관련 보험금 누수비율이 9.4%에 이르는 보험개발원 연구에 근거, 이번 자동차관리법의 개정으로 자동차 임의·부당수리로 인한 보험금을 연간 1천억원 가량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연합뉴스

지역난방요금 권역별 차등화

빠르면 내년부터

빠르면 내년부터 지역난방 열 요금에 전국 권역별로 차이가 커질 전망이다. 아울러 지역난방에 이어 지역냉방을 획기적으로 늘리는 방안도 중장기 과제로 추진된다. 산업자원부는 11일 이런 내용의 집단에너지 중장기 혁신방안을 연구용역 등을 거쳐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집단에너지는 열병합 발전소나 자원회수시설 등에서 생산된 열을 배관망을 통해 특정지역 수요자에게 공급하는 방식으로, 흔히 지역난방으로 불리며 이를 통해 현재 우리나라 전체 주택의 11%인 149만 가구가 난방을, 15개 산업단지가 공정용 증기를 공급받고 있다. 산자부에 따르면 열 요금은 인건비를 포함하는 고정비 상향과 연료비 변동분 등 두 항목으로 나눠 사업자별도 요금을

책정하는 방식이 사용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지역난방공사의 공급가격이 기준가격이 때 실질적 차이가 크지 않은 형편이다. 산자부는 그러나 앞으로는 전국을 3~4개 권역으로 나눠 지역별 요금 상한을 설정하는 방식으로 요금제도를 바꾸고, 매년 원가를 반영해 지역별 상한을 재조정하고 지역간 편차는 ±15% 내외로 제한하기로 했다. 또 집단에너지 사업자를 선정할 때 평가의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열 수요와 전기판매단가 등 항목별로 산정기준을 담은 사업계획 작성기준도 만들어 제시하기로 했다. 산자부는 열병합 발전소를 통해 열과 전기를 생산한 뒤 이를 특정지역에 판매하는 구역형 집단에너지 사업도 효율성을 높일도록 개편하는 방안을 중장기 과제로 추진할 방침이다. /연합뉴스



'삼성 하우스' 수중 퍼포먼스

삼성전자가 서울 코엑스 이쿠아리움에서 매 주마다 '2007년형 하우스 드림 세팅' 알리기 행사를 열어 보티첼리의 명작 '비너스의 탄생'을 영상시키는 수중 퍼포먼스를 연출하고 있는 가운데 관람객들이 신기한 듯 바라보고 있다. 이 행사는 내달 15일까지 계속된다. <삼성광주전자 제공>

지난해 제조업 현금흐름 좋아졌는데... 설비투자보다 지분투자 '올인'

지난해 국내 제조업체들의 현금흐름은 좋아졌지만, 설비투자보다는 기업지분 투자 등 '손쉬운' 투자에 더 힘을 쏟았던 것으로 분석됐다. 11일 한국은행이 총자산 70억원 이상의 제조업체 5천494개를 대상으로 분석한 '2006 제조업 현금흐름'에 따르면 지난해 제조업체가 영업활동으로 얻은 현금 수입은 업체당 평균 117억7천만원이었다. 이는 2005년(108억6천만원)에 비해 8.4% 증가한 것이다. 한은 관계자는 "환율하락 및 유가 상승 등으로 경영여건이 악화해 당기순이익은 감소했지만 감가상각비 등 현금 유출을 수반하지 않는 비용이나 선수급 등이 늘면서 현금수입이 늘었다"고 설명했다. 투자활동에 의한 현금지출은 업

체당 평균 117억2천만원으로 2005년(98억7천만원)보다 18.8% 증가했다. 이에 따라 업체당 평균 현금보유액은 65억2천만원으로 2005년(62억3천만원)에 비해 2억9천만원 늘었다. 다만 현금 증가 규모는 2005년 11억4천만원보다 크게 줄었다. 이는 영업활동으로 얻은 현금수입보다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지출이 더 큰 폭으로 증가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제조업체들의 작년 투자활동 내용을 보면 '보수적' 투자에 보다 집중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설비투자 등 유형자산에 대한 순지출 규모는 업체당 평균 88억9천만원으로 2005년보다 5억4천만원(6.4%) 증가해 4년 연속 증가세를 이어갔으나, 증가율은 전년(7.2%)보다 다소 하락했다. /연합뉴스

2억짜리 담보맨 月 57만원 수령 '주택연금' 오늘부터 판매

65세 이상 1주택자만 자격

집 한 채로 평생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주택연금' 상품이 출시된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11일 서울 프라자호텔에서 권오규 경제부총리와 시중은행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주택연금 출시 기념식 및 판매 협약식'을 갖고 12일부터 금융회사 창구를 통해 주택연금 상품을 출시한다고 밝혔다. 주택연금은 만 65세 이상 고령자가 소유 주택을 담보로 맡기고 금융기관에서 연금형식으로 월 일정액을 받는 대출 상품이다. 금융공사는 이용자의 기대수명과 주택가격상승률(연 3.5%), 장기 이자율변동 예상치(연 7.12%) 등을 기준으로 고객에

게 지급할 월 연금액 규모를 확정했다. 이에 따라 2억원 짜리 주택소유자의 경우 가입 당시 연령이 만 65세이면 매월 57만6천원을, 70세이면 매월 70만9천원을 받게 된다. 1억원 짜리 주택은 65세의 경우 매월 28만8천원, 70세이면 35만4천원을 받는다. 가입자가 사망한 뒤 금융기관이 대출금을 회수할 때 적용하는 대출금리는 3개월 양도성예금증서(CD)의 유통수익률에 1.1%포인트를 더한 수준(11월 기준 연 6.1%)을 적용키로 했다. 주택연금을 이용하려면 주택금융공사 광주지사(062-233-2541)나 금융공사 고객센터(1688-8114)를 통해 상담을 받은 뒤 주택가격평가 및 보증심사 등을

주택연금-역모기지론의 차이

역모기지론은 시중은행이 판매하고 주택연금은 주택금융공사가 판매한다.대출기간은 역모기지론이 5~15년이지만 주택연금은 종신이다. 신청자격도 역모기지론은 40세 이상 주택소유자이지만 주택연금은 65세 이상이다. 또 역모기지론은 만기 일시상환인데 반해 주택연금은 이용자 사망후 주택채권 금액으로 상환한다. 역모기지론을 받은 사람이 대출을 상환하지 못하면 대출해준 금융기관이 주택을 처분하지만 주택연금은 이용자가 사망할때까지 거주가 가능하다.

거처 보증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보증서 발급부터 가입까지는 보름이나 한 달가량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자세한 내용은 공사 홈페이지(www.khfc.co.kr)를 이용하면 된다. /정필수기자 bungy@kwangju.co.kr

소나타 기름 가득 채우면 세금 6만1,813원

NF소나타에 휘발유를 가득 채워넣으면 기름값은 10만8천445원이고 이 가운데 유류세가 6만1천813원. 11일 업계에 따르면 대한석유회社 홈페이지(www.petroleum.or.kr)의 '내 차 기름값 알아보기' 서비스를 이용하면 이와 같이 주유할 때 기름 값이 얼마나 되고 유류세를 얼마나 내는지를 명쾌하게 알 수 있다. 서비스 페이지에서 제조사와 차종을 선택하고 주유량을 입력하면 금액과 주행거리와 더불어 세금까지 구체적으로 나오는 것이다. 현대차의 뉴그랜저TG(2.7)의 경우 75ℓ를 꽉 채우면 기름값은 11만6천191원인데 유류세는 6만6천228원이고 르노삼성 뉴SM5는 65ℓ '만탱크'에 주유비가 10만699원, 세금이 5만7천398원이다. 기아차 모닝의 경우 35ℓ에 기름값이 5만4천222원, 이 가운데 세금이 3만906원이고 쌍용차의 체어맨-뉴(CM600)는 80ℓ에 기름값 12만3천937원, 세금 7만644원이며 GM대우의 라세티(1.5)는 52ℓ에 기름값 8만559원, 세금 4만5천918원이다. 휘발유 가격은 1ℓ당 1천549.22원으로 지난 6월22일자 한국석유공사의 평균 모니터링 가격이 기준이다. /연합뉴스

전남도-광주은행 중기육성 금융 협약



'전남도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금융지원 협약식'이 11일 전남도청에서 박준영 전남지사(가운데), 정태서 광주은행장(오른쪽), 김규복 신용보증기금 이사장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이번 협약으로 농수산물·화학·철강·기계 관련 제조업과 전남도 유망 중소기업 등 총 4천150여개 지역업체가 우대금리 혜택 등 금융지원을 받게 된다. <광주은행 제공>